북한 핵위협 극복을 위한 한일 안보협력 필요성 : 도전과 극복★

김 연 준*

요 약

2018년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다. 금년 4~6월에 남한·미국-북한간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위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한국에 있어 '북핵의 CVID'만이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하한선) 이지만, 북한+중국+러시아 등에게 '북핵의 CVID' 달성은 그들의 정치·군사적 위상을 크게 축소시킨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북-미북 정상 간에 북한 핵을 비핵화한다고 합의하더라고 그 실천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의 존재는 단순히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동북아에서 패권경쟁을 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국가이다. 북한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에게 자꾸 뭔가를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존재이다. 이에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강압적인 패권행사를 거부하고, 비핵화 합의에 대한 이행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북핵의 CVID'달성을 위한 차선의 대안으로써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e Necessity of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in order to Overcome North Korea's Nuclear Treats: Challenge & Conquest

Kim Yeon Jun*

ABSTRACT

In the year 2018, South Korea faces a crucial decision with regard to reunification. Starting from inter-Korean and US-North summits held from April through June, A rough journey for North Korea'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began. Although South Korea insists that North Korea's Nuclear 'CVID' is the only minimum condition in the process of peaceful reunification, North Korea and other countries who support North Korea, including China and Russia, will possibly claim that North Korea's Nuclear 'CVID' will minimize their political and military positions internationally. Despite representatives from each country agreeing to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t is inevitable that many challenges still need to be resolved during the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inese government, North Korea is not a country that stimulates international conflicts. Instead, China can utilize North Korea as their political and tactical leverage against the US in order to compete for hegemonic power in Asia. In order to reject the emerging supremacy of China and resolve uncertainties in the denuclearization agreement and implementation process, I suggest the necessity of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as a 'second alternative' to achieve the North Korea's Nuclear 'CVID'.

Key words : North Korea's Nuclear 'CVID', Hegemonic Competition,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접수일(2018년 4월 30일), 수정일(2018년 6월 20일), 게재확정일(2018년 6월 29일)

★ 본 논문은 2017년도 용인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재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용인대학교 군사학과

1. 서 론

2018년 들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남한·미국-북한 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의 비핵화를 합의하는 경천동지할 상황이 조성되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한·미국과 북한간의 정상 회담은 작년 말까지 한반도에 조성된 일촉즉발의 엄중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만큼 극적으로 조성되었다.

지난 2018년 2월에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핵도발로 인하여 한반도는 전쟁발발 직전의 엄중한 상황이었다. 즉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3일 수소폭탄으로 추정되는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9월 15일과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급 미사일을 연이어 시험 발사하면서 같은 해 연말까지 동북아지역에서 북한 핵 위협이 새삼 부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시사 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도 이에 맞대응하여 괌에 대한 포위사격을 위협하는 등 이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서 미국 쪽에서는 북핵 선제타격론이 거론되는 등 극도의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2018년 1월 30일 행해진 연두교서에서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새삼 강조하면서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을 대북정책의 기본으로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현시점에서 북한의 핵능력은 전술핵부터 전략핵(수소폭탄급)을 망라하여 핵폭탄의 다종화와 소형화에 성공하였으며, 미사일 기술은 단거리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 급까지 완성한 상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억제하려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와 국제사회에서 모든 평화적인 노력은 실패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93년에 한반도에 조성되었던 '영변 핵위기'때 우리가,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영변 핵시설 폭격계획에 동의하고 이를 시행하기위한 준비단계에 적극 동참하였거나(억제단계), 억제실패시 선제타격단계에 이를 시행하였다면 현재와 같은 엄중한 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비핵화'를 명분으로 남한-북한-미국 정상회담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된 배경을 분석해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여 북핵문제는 최우선으로 해결해야할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대두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른 경제제재 이행에 중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강요하게 되었다. 아울러, 북한은 미국의 현실화되는 선제타격우려와 중국의 강력한 경제제재 이행으로 인하여 그들의 체제유지를 명분으로 완성한 핵과 미사일이 오히려 정권을 조기에 파멸당할 수 있다는 절박감에 '비핵화'를 명분으로 대화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더하여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남북-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관련국가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이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6년 만에 처음인 외국정상과 회담을 그동안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베이징을 전격적으로 방문하였으며 극진한 환대를 받으며 북한 핵문제의 '비핵화'방안에 대한 수준과 방법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북핵문제에 대한 '차이나 패싱'을 일거에 불식하면서, 향후 전개될 문제해결의 복잡성을 예견하게 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하면서 대외정책 수행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즉 트럼프는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여 협정체결이 임박하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전통적인 동맹국의 수출주력상품인 철강제품 등에 대한 관세폭탄 부과 등 소위 '트럼프 변수'로 불리는 대외정책의 수정과 변경으로 미국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우리와 직접적 관련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면서 파기를 압박하여 재협상을 하였고, 더하여 금번에 개정 합의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그 비준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상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포괄적 수준인 한미동맹의 이행가능성 마저 시험받는 상황에 있다. 반면에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시진핑 주

석 간 정상회담, 이어진 이용호 북한외무상의 중국과 러시아 방문 등으로 북한-중국-러시아간 과거의 강력한 동맹체제 복원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남한-북한-미국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합의해야만할 우리의 하한선(下限線)이 북한이 보유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 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미국의 '트럼프 변수'와 북한-중국-러시아간 공조에 의해 상호 적당한 수준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고 이행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면서 이를 관리해야만 한다.

따라서 북한 핵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2가지 가설을 성립할 수 있는데, "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② 비핵화의 상황은 자국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먼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가설은 핵전쟁과 그 위협을 극복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억제 혹은 타격역량을 보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핵은 국제레짐에 의해서 기존의 핵강대국을 제외하고는 보유, 개발, 이전 등이 금지되어있어 강력한 동맹억지력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즉 한미동맹과 필요하다면 이에 더하여 주변국과 안보협력의 강력한 공조 하에 '확장억제전력'의 실효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대안을 강구해놓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비핵화의 상황은 자국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루한 협상과 시행과정에서 만에 하나, 핵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중거리~대륙간탄도 미사일 만 폐기하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비핵화 여건이 보장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현 수준에서 동결한다 하여도 북중관계만 원만하게 유지된다면 중국의 국가이익에 특별한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인식하에서 북한 핵에 대한 '비핵화' 협상과 그 이후 이행과정에 대한 위 2가지 가설을 현실주의 관점으로 정치・군사・경제적 수준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하에서 일본의 대응,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등 을 고찰하며, 제3장에서는 동맹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제4장에서 동맹이론에 기초하여 한반도에서 미국 확장억제전략의 이행가능성과 제한사항을 평가해보며, 이를 토대로 미국의 확장억제전략 이행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한일 안보협력의 레버리지 효과를 정책적 수준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2. 21세기 국제질서 하, 북한핵위협과 대응

2.1 미국-중국 패권경쟁과 일본의 대응

21세기 국제질서의 주요특징은 기존에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주요 국가들 간의 패권질서를 유지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국제적 영향력이나 경제적 위상의 쇠퇴를 경험하였다. 반면에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신흥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기위해 세계 주도권 확보경쟁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패권경쟁 구도 하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위대한 미국 재건(making america great again)' 추진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신형대국관계'를 각각의 국가전략으로 추진하면서 자국 주도하에 국가이익과 세계적 리더십 확보를 위해 첨예한 대립과 사안별 협력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 재건'을 위해 경제적으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자유무역을 축소하는 대신에 보호무역성향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대외문제에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주요 이슈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입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전임인 오바마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pic partnership)'[1] 가입을 거부하였고 기존의 개별국가들과 체결한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를 압박하면서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고립주의로 전환할 것이라는 일부 예상과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즉, 트럼프의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강화하면서 지역안보 문제에 대하여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주도하에 추진하려던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 간 지역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세계무역규모의 1/3정도와 전세계 GDP의 40%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2017년 1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발생을 이유로 TPP탈퇴를 선언하였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역내 미국과 기존의 동맹관계 유지와 강화, 미국 국방비 증액과, 북핵문제의 적극적인 개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도 강대국으로의 변환을 모색하고 있다. 2012년에 출범한 시진핑 체제는 중국의 팽창정책을 견제하는 미국과 충돌가능성을 우려해 '신형대국관계'[2]를 강조하는 한편, 평화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공존공영 하는 미·중관계의 정립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경제와 군사 양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먼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중앙·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주장하였다. 이는 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 전략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실크로드(일로) 주변의 60여 개국을 포함하는 거대 경제권이 구성되는 것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 등 중국의 대외경제 영향력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지난 2015년에 국방비를 1,458억 달러를 지출하여 세계 국방비 지출 순위에서 미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국방비 투자를 통해 미국의 군사력에 상응하는 첨단 군사력 건설과 육성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군사적 자신감을 토대로, 시진핑 주석은 2014년에 개최된 제4차 '아시아교류 및 촉진구축회의(CICA)'에서 공동안보, 종합안보, 협력안보, 그리고 지속가능한 안보를 골자로 하여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로 주장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에 대한 정면대결을 공식화 하였다.[2]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목표는 역내 불안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주력할 수 있는 평화로운 환경을 창출하는 한편, 경제협력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자 한다. 이러한 중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미일동맹 강화,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력 강화, 그리고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사실상 중국은 미국과 미일동맹을 가장 엄중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본은 2010년을 기점으로 지역 강국으로서의 지위상실이라는 전환기적인 국면을 맞이하였다.[1] 대외적으로, 같은 해에 중국과 일본 간에 발생한 해양영토 분쟁으로 일본령(領) 댜오위(센카쿠) 열도 근해에 중국 어선의 불법 월경과 이에 대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희토류 전면수출 금지 등의 압력에 굴복하여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과 중국 간에 갈등은 (일시적인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인 갈등으로 고착화되었으며, 일본의 경제력도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에 GDP를 추월당하여 세계 3위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수세적인 상황에서 2012년 12월에 출범한 아베 정권은 '전후체로부터의 탈피'와 '전략적 외교의 추진'이라는 기치 아래, 적극적인 대내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은 미·일 동맹체제 하에서 안전보장을 확보하면서도 자국의 경제력에 걸맞게 안보역할을 증대함으로써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의 아베 정권은 미·일 동맹의 복원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주일미군의 재편, 새로운 미·일 가이드라인 설정 등 미·일 동맹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또한 그는 2014년 7월 평화헌법(1945년 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키로 결정하였으며, 결국 2015년 9월에 국내외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제화하였다.

둘째, 일본은 지역강국으로서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남중국해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해 동남아를 사실상 중국의 동맹권으로 만들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일본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일 동맹 체제를 동아시아 지역안정의 기초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신뢰조성과 다자외교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추진해 왔다.

셋째, 일본은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일 무역마찰 해소, 수출 및 첨단산업 주도의 비교우위 확대 등 기존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면서도,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대비해 자원과 시장을 안정적으로

2) 2012년 2월 방미 중에 시진핑 주석은, 신흥강대국(중국)과 기존강대국(미국) 간의 대립과 충돌을 피하려면 평등에 기초한 상호호혜적인 새로운 대국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이는 중국의 핵심이익과 합리적 관심을 미국이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임.

확보하기 위해 일본과 캐나다 등 태평양 연안국 11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3]을 주도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팽창에 대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영향력 확보를 위해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등 '보통국가'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2.2 2016년 이후, 북한 핵위협과 국제사회 대응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시작한 이래 미사일 시험발사를 병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핵화의지를 시험하거나 무력화하였다. 2016년 이후로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도발을 계속하였다. 먼저,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ICBM급인 '화성-14호' 미사일 도발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270호, 2321호, 2371호)하였다. 북한은 지난 2016년 한해 만에도 2차례(1월 6일, 9월 9일)의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하였으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017년 7월 4일과 28일 잇따라 ICBM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주요수출품인 광물자원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해외로 파견된 인원 외에 추가로 신규 노동자를 해외에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한편 주요 인사들의 해외 자금줄을 차단하는 블랙리스트를 선정하는 등 역대 최고수준의 대북제재를 결의 하였다. 이번 제재가 발효됨에 따라 북한의 수출은 연간 10억 달러(약 1조1천여억 원)가 감소되도록 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었다. 북한의 2016년 전체 수출액 약 30억 달러 중 1/3을 규제하도록 하였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결의안 채택 후 "이번 제재는 북한에 대한 기존의 어떤 제재안보다도 더 큰 단일 제재로는 사상 최대"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5]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외화벌이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김정은의 통치자금원이 차단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북한 내 정권 보위세력인 중간간부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하여 이들 중간간부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북한 정권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북한핵개발의 자금원의 차단을 위해 2016년 2월 11일에 개성공단을 폐쇄하였고, 이어서 같은 해 7월 8일에 한국에 '사드(THAAD)' 배치를 공식발표하였다. 또한 4차 핵실험이후 불과 8개월 만인 2016년 9월 9일 5차 핵실험을 도발하였고, 이에 우리는 2017년 3월 7일 성주지역에 방어용 미사일인 '사드' 2기를 임시배치 하였다. 한편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찬성한다면서도 북한의 민생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교역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도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인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과 수출중단에는 반대하며, 이미 용도 폐기된 6자회담 필요성을 재차 주장하는 등 국제사회 경제제재의 한계를 실감하게 하였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사드의 임시배치를 빌미로 일명 '사드 보복'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지속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급인 '화성-14호' 미사일 도발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75호, 2397호)를 하였다. 이에 따라, 정유제품의 대북 수출이 연간 50만 배럴로 다시 제한되었으며,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할 경우에는 유엔에 보고를 의무화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도 신규 취업은 금지되었고, 기존 노동자들도 24개월 이내에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이 차단되었으며, 해상 검색 차단이 강화되고, 조업권의 거래가 금지하였다.

결국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이래로 10차례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통해 경제제재를 하였으나 북한의 핵능력을 저지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에 협력함으로써 제재 참여국의 역할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북한과 동맹에 준하는 수준의 이해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제재보다는 북한과의 교역을 통해서 더

3)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은 일본과 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 11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임.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주도로 중국의 경제적 팽창에 대응하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가입을 거부하면서 일본이 주도하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으로 전환되었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의 존재는 단순히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동북아에서 패권경쟁을 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국가이다. 북한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에게 자꾸 뭔가를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존재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중국에게 제재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5]

이상과 같이, 비록 북한의 핵도발이 점증함에 따라 훨씬 더 강력한 내용의 경제제재가 안보리를 통하여 채택되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날 지의 여부는 중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최대교역국으로서 중국의 위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 핵의 'CVID' 합의와 이행의 성공의 열쇠는 중국과 러시아가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4)

3. 동맹이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

동맹(alliance)을 체결한 경우에, A와 B의 두 국가는 자국이 원하지 않거나 불리하더라도 동맹국이 요청하면 가용한 모든 군사력과 국력을 동원하여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서로에게 하고 있고, 자신이 상관없는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 최악의 상황에서는 국가의 명운이 바뀔 수도 있다. 메스키타(Bruse Beno de Mesquita)는 1815년 이후 전시에 동맹공약의 이행정도를 분석하였는데, 동맹국가가 침공을 당했을 경우 동맹체결 국가는 76%가 지원을 받은 반면에, 동맹 미보유 국가는 17%만이 지원을 받았다고 하였다.[6]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사항은 전시에 지원을 위해서라며 평시에 동맹을 체결하는 것이 체결하지 않는 것보다는 유리하며, 평시에 동맹을 체결하였더라도 정작 필요한 전시에 동맹체계가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전시 동맹의 실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면 평시에 동맹을 체결하고, 전시 동맹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평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에 스나이더(Glen H. Snyder)는 동맹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위험은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의 위험이라고 언급하고 있다.[8] 그리고 월트(Stephen M. Walt)는 동맹의 약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다음의 세 가지 즉, ⓐ 위협 인식의 변화, ⓑ 신뢰성의 저하, ⓒ 국내정치 영향이라고 제시하고 있다.[10] 이를 종합하면 먼저 동맹주체국은 '연루의 위험을 감수' 혹은 '방기를 선택'의 2가지 방안 중에서 정책 결정을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연루의 위험'을 선택하였다면 '위협의 인식', 신뢰성 유지'와, 국내정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연루의 수준과 정도를 결정하는 절차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적용하여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위협(원인변수)', '미국의 확장억제전력 이행(결과변수)' 여부와, '동맹 형성요인(조절변수)'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연루)할 것인가? 혹은 포기(방기)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여부이다. 이 문제는 1차적으로 원인 변수인 북한의 핵위협 수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즉 북한의 핵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는 한반도의 전략적·지정학적 가치가 미국의 이익이라고 판단되면 '연루'를 선택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면 '방기'를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그들의 패권유지 혹은 강화를 위해 '한국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연루에 위험'을 선택할 것이지만, 그 반대라면 '포기'를 선택할 것이다. 즉 연루 혹은 방기의 핵심적인 기준은 ① 미국의 이익에 기반한 '한국의 가치' 될 것이다.

둘째, '위협인식' 요인 이다. 북한의 핵위협의 수준을 고려하여 그 위협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면 시행가능성은 낮을 것이지만, 반대로 미국 본토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만한 수준이라면 그 가능성은 증대될 이며, 아울러 북한의 우방세력인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정도는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 위협능력을 전략적으로 축소한다면 그 시행가능성은 감소하며, 아울러 미국과 패권 상대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정도도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협인식 요인'의 핵심적인 판단기준은 ②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과 ③ 한반도의 이해 관련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을 고려할 것이다.

셋째, 신뢰성의 요인이다. 핵과 미사일 전력은 그 파괴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국제레짐에 의해서 기존의

4)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교역이 전면 차단될 경우라도, 러시아를 통해서 경제교역을 대치할 수 있음.

핵강대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핵전력의 보유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 모든 국가나 정치집단에 의해 보유, 실험, 이전과, 개발 등 핵확산을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성실한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핵강대국의 확장억제전력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개별국가는 생존을 위해서 독자적인 핵무장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에 확장억제전략 시행여부는 동맹국인 일본, 나토와, 호주에 대한 신뢰와 연결되어 있다. 즉 미국의 확장억제전략 시행은 ④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신뢰성 제고(일본, 나토, 호주 등)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정치의 영향 요인이다. 국내정치 요인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지표는 당시 상황에서 미국 정치지도자의 결심 혹은 국민들의 여론이 될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정치체제에 따라서 정치지도자의 신념과 국민 여론이 정책수행이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다. 즉 민주주의 국가인 경우 정치지도자의 임기는 선거를 통해서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여론을 많이 고려해야하지만, 사회주의 국가는 상대적으로 장기간 집권이 가능하여 정치지도자의 신념을 더욱 고려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정치지도자의 신념은 국민여론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가정 하에, ⑤ 북한 핵위협에 대한 '미국 국내 여론'이 지배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미국은 ① 미국의 한국에 대한 가치평가, ②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③ 핵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④ 미국의 '동맹국(일본, 나토 등)에 대한 확신 유지'와, ⑤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 국내 여론' 등의 동맹변화 요인을 조절변수로 하여 한반도에서 확장억제전략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4.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 가능성 평가

북한 핵도발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전략 이행 가능성을 앞장에서 논의한 5가지 동맹변화 요인을 기준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가치' 인식 이다. 미국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대응하면서 세계 패권유지를 위해, 지난 2012년 이래로 '전략적 재균형(strategic rebalancing)' 정책으로 전환하였다.[11] 미국이 동맹 및 우방국들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아태지역에서 군사력을 축척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아시아 우선 정책(Pivot to Asia)'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급부상하는 중국으로의 세력전이를 거부하면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아시아 우선 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2017년 4월 개최된 트럼프 대통령-시진핑 주석 정상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중국에 경제적 이익을 양보하고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지정학적 이익을 양보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5] 결국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근접해있으며, 한국전쟁이래로 유지해온 동맹국으로써 한국의 가치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개별동맹으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효용성과 신뢰성을 비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려 한다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中에서 유지 노력과 비용이 적게 드는 체재를 선택하려 할 것이다.

둘째, 북한 핵과 미사일의 능력 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래 지금까지 6차례 실험을 통하여 2016년 12월경 이미 13~30개의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7] 특히 북한이 2017년 9월 3일 실시한 수소폭탄 시험의 위력은 엄청나서 미국은 120Kt, 일본은 160Kt, 그리고 한국의 어느 원자력 및 핵공학 전문가는 200Kt까지 추정하고 있다.[12] 송영무 국방장관이 북한이 핵무기를 500Kg 이하로 소형화한 것으로 평가한 바도 있듯이, 북한은 대부분의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공격할 수 있

5) 트럼프-시진핑 간 최초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경제문제인 무역역조 해소(환율조작국 지정 유예, 위안화 절상, 지적재산권 보장 등)를 최우선 과제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대신에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대북 경제제재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함.

는 능력을 구비한 상태이다.[3] 또한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하여 사거리 1만 3,000Km에 이르는 ICBM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워싱턴과 뉴욕 등 미 대륙 전역을 타격할 수 있고, 미국의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 또한 '화성-15형'을 ICBM으로 규정하였다. 더하여 북한은 2016년 8월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500Km 비행시키는데 성공하였는데 최소에너지 궤도였다면 2,500Km까지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앞으로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건조하고 이를 전력화에 성공할 경우 북한은 미국 영토나 본토에 몰래 잠입하여 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다. SLBM은 미국 BMD로도 요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소형화・다종화・실전화되어 미국의 본토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위협은 최우선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북한과 미국 간에 북한 핵 비핵화를 위한 정상회담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중거리~ICBM급 미사일만 불능화 한다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제외하고 미본토, 괌지역 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미국과 핵경쟁 상대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경우 핵실험과 북한과의 우호 관계유지를 별도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먼저, 미국과의 '전략적인 경쟁과 협력'의 딜레마이다. 중국은 미국과 패권경쟁을 하는 당사국으로 경쟁관계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미국과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경제적 성공에 기인한다.[9] 따라서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지역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 왔으며,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다만, 북한문제에 관한 한 중국은 '협력'보다는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아직까지도 중국내에서는 한국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붕괴되어 미국의 군사력이 자국 국경에 도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경우 대만과의 통일을 추구하는 중국에 전략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핵무기의 국제적 확산과 비확산'의 딜레마이다.[2] 중국은 '핵확산방지조약(NPT)'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서명국가 임에도, 핵과 미사일을 은밀하게 전파한 '전략적 확산자(strategic proliperator)'이다. 중국은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파키스탄에 핵기술을 제공했고, 중동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이란에 핵 및 미사일 기술을 전파했으며, 미국과 일본을 겨냥하여 북한에는 DF-3(CSS-2)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였다. 북한의 핵보유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당장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문제에 주의를 돌림으로써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에 대한 개입의 수위를 낮출 수 있다. 또한 중국내 인권이나 환율문제,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도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 러시아 또한 미국과 장기적으로 패권경쟁을 하고 있어 북한 핵문제에 동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중국-러시아 3국에 입장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는 최악의 선택인 반면에, 북한 핵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과 미상일의 완벽한 폐기만이 안보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전개될 남북-미북 정상회담의 비핵화 합의와 이행과정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하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확인할 때까지 한국-미국-일본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성급한 합의 도출을 경계해야 한다.(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금번 재임기간이 2020년까지이며, 2018년에 중간 선거를 치르도록 예정되어 있음.) 넷째, 미국의 '동맹국(일본, 나토 등)에 대한 확장억제시행의 신뢰성 보장'이다. 핵전쟁에 연루될 위험이 크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도 높지 않으며, 중국과 러시아와도 갈등이 예상되더라도 미국으로 하여금 확장억제전략 이행을 시행하도록 하는 요소는 동맹국에 대한 신뢰성 보장이다. 미국이 한국에게 약속한 확장억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다른 동맹국들 역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신뢰하

지 않을 것이고, 적대세력들은 미국의 개입의지를 낮게 평가하여 도발할 수 있다.[3] 미국은 현재 나토의 27개국, 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 호주 등 32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안보 공약을 믿지 못한다면,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은 의심받고 급격히 약화될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확장억제전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장 불안해할 미국의 동맹국은 일본이다.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근접해 있고 현재 북한의 핵능력만으로도 직접적인 공격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일본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극단적인 경우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이 미국에 도전하는 상황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국내여론' 이다. 미국의 최근 여론은 타국의 문제에 개입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미국의 퓨 연구소(pew research center)가 2016년 5월 5일 발표한 자료에서는 대외 문제 개입에 있어서 미국 사람의 37%만 찬성(57% 반대, 5% 무응답) 하였다. 반대의 경우 2013년의 52%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평균 30%에 비하면 매우 높아진 상태이다.[3]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구호로 내세웠고, 2017년 9월 유엔총회에서도 이 슬로건을 언급하였다. 2015년 미국인에 대한 조사에서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찬성 47%, 반대 49% 이었는데, 훨씬 위험한 핵무기의 사용에 대한 지지율은 더욱 신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적으로도 미 대통령이 독단으로 핵보복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전쟁권한 결의안(war power resolution)'에 의하면, "미국, 미국 영토, 소유물, 또는 미국 군대에 대한 공격으로 인하여 형성된 국가 비상사태" 이외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전쟁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확정억제전략 이행을 위해서는 미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 미 의회에서 토의하게 되면 그 이행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상과 같이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전략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긍정적인 요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 보유, 다른 동맹국(일본, 나토 등)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판단이 필요한 요소는 한국의 가치,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이라는 점이며, 다소 부정적인 요소는 미국의 국내여론이다.

5. 결 론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수교를 한지 25년만인 2017년 양국 간 교역규모는 1,740억 달러로 우리의 1년간 총교역규모 1조 5,520억 달러 중 11.2%를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하였으며[15], 이러한 활발한 경제교류에 힘입어 지난 2008년 양국 간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다. 그런데 2016년 북한의 4~5차 수소폭탄 실험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4차 핵실험 당일과 이후 2차례에 걸쳐 시진핑 주석에게 핫라인을 걸었으나 시 주석은 끝까지 전화자체를 받지 않았다.[14] 더하여 북한의 핵위협이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고심 끝에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2017년 3월 '사드(THAAD)' 2기를 임시 배치하자,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인 소위 '사드 보복'을 자행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의 모습은 포기한 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대국가의 기본적인 주권사항마저도 침해하는 몰염치한 행위도 불사하였다. 되돌아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계속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엄중한 도발행위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도 한국의 생존문제는 외면하체, (관계당국은 평화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냉정과 자제만을 촉구하는 등) 북한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거나 방관하는 행태로 일관해 왔다.

북한의 핵문제는 한국에는 생존이 달려있는 위중한 사안임에도, 중국은 이와 같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중국은 북핵문제를 아시아에서 미국과 패권경쟁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미국의 압박에 대한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들의 안방지역인 아시아지역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위해서, 남중국해에 인공 섬을 불법적으로 건설하였고, 동중국해에서는 일본령(領) 댜오위(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분쟁과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으로 주변국들과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북한 핵과 미사일은 한국・미국・일본 등에 직접적인 위협을 제시함

으로 중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게 하는 방어 장치인 셈이다. 만약 '북핵의 CVID'가 이루어진다면 중국은 그들의 안방에서 미국-일본 등과 직접적으로 패권대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된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남북-미국 정상회담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환대하면서 '북핵의 CVID 무력화 방안'에 대하여 조율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북한 핵의 비핵화에 남북-미북 정상회담에서 전격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은 진정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북한은 그들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핵의 CVID' 달성만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군사용 핵을 보유할 수 없는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기반 하에, 동아시아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패권약화 우려에 구조적인 대비책으로 한일안보협력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에 한일 안보협력의 가치를 외부적인 필요성과 내부적인 저항요인으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 대한 가치이다. 미국이 경제적인 효율성을 고려하여 한국전쟁 이전에 하였던 '애치슨 선언'과 같이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주일미군만 운용하려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러시아-북한의 정치·외교·군사적인 위협에 직접 노출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일본은 세계3위에 경제대국에 부합되는 패권 유지와 행사에 융통성을 상실하게 된다. 즉 북한-중국-러시아의 정치·군사적 위협은 한국과 일본이 新북방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일 안보협력'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군사·기술적으로 북한-중국-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미사일 방어체계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다. 북한의 도발로부터는 상호 중첩된 정보와 다단계 방호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선제타격을 위한 최신의 신속·정확한 정보의 유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셋째,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서도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별개의 체계로 작동하는 것 보다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시스템화하여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을 향유할 수 있다.[6] 넷째, 우리는 중국의 소위 '사드 보복'을 경험하면서 우리 수출시장의 다변화 필요성에 대하여 절감하였다. 이에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대신하여) 일본이 주축인 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동참한다면 우리 수출시장의 다변화는 물론 한국경제의 '중국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한일 안보협력은 외부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기 어려운 내부 저항요인으로 아베 정권의 '보통국가' 추진과 수정주의 역사관, 국민 여론 등을 수 있다. 첫째, 아베 정권은 지난 2015년 '평화안보법제 정비'를 통해 일본 자위대(自衛隊)의 활동범위를 세계 전역으로 확대하였으며, 한·일간 과거사의 아픈 상처인 위안부 문제와 독도문제 등에 대한 극우적인 태도는 옛 일본 군국주의의 악령을 떠오르게 하고 있다. 둘째,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치·외교·군사적 협력을 더 이상 높은 차원으로 확대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요인은 불행했던 과거사이다.[14] 또한 이런 연유로 양국 국민 간에 비우호적인 감정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2015년 6월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일본인 73%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하였고, 한국 국민의 85%가 일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4] 이러한 결과는 양국 간 근본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경우 양국 국민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21세기 미국-중국의 패권경쟁이 치열함은 한일 안보협의에 대한 외부적 필요성을 더욱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와 일본의 전문가그룹은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과거사의 악용(惡用)을 자제하고, 한일 간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내부 저항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만 한다.

한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 한국에게는 '북핵의 CVID'만이 협상에 하한선이지만, 북한+중국+러시아에게 '북핵의 CVID' 달성은 그들은 입지를 축소시킨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우리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핵 비핵화'의 합의와 이행과정에서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완벽한 한미 공조체제 유지 하에 차선의 대안으로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각별히 인식해야 한다.

6) 한·미·일 동맹의 통합문제는 신중해야함. 이러한 이유는 중국을 자극하여 동아시아에서 新냉전구도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

참고문헌

[1] 김홍규, “시진핑 시기 중국외교와 중일관계 분석,”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8집, pp. 26-27, 2015.

[2] 박창희,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미중관계 전망,”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4집, pp. 15-16, 22, 2017.

[3] 박휘락, “북핵 고도화 상황에서 미 확장억제의 이행 가능성 평가,” 국제관계연구, 제22권, 제2호, pp. 97-98, 104, 2017.

[4] 이상우, “동북아 안보질서와 한일 협력,” 신아시아, 제3호, pp. 14, 2014.

[5] 정한범, “제재이론으로 본 미국의 대북제재,” 안보와 통일 연구, 창간호, pp. 13-14, 24, 2017.

[6] 김열수,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법문사, 2015.

[7] David Albright,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A Fresh Look,”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Report, pp. 1-3, 2017.

[8]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 pp. 461-465, 1984.

[9] Michael R. Chambers, “Farming the Problem: China's Threat Environment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SSI, pp. 41, 2007.

[10] Stephen M. Walt, “Why Alliance Endure or Collapse?”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Vol. 39. No. 1, pp. 158-164, 2008.

[11] Department of Defence, ‘Sustaining U.S. Gr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th Century Defence’, Department of Defence, 2012.

[12]『중앙일보』, 2017년 9월 14일.

[13]『한국일보』, 2016년 1월 11일.

[14]『헤럴드 경제』, 2015년 6월 9일.

[15] 한국무역협회 통계 (http://stat.kita.net/main.screen, 검색일: 2018년 4월 15일).

〔저자소개〕

김 연 준 (Kim-Yeon Jun)
1983년 3월 문학사
1996년 11월 국방관리전공 석사
2012년 8월 경호학 박사
현재, 용인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email : kyj23509@naver.com